

# “행정체제 개편, 2010 지방선거前 완료”

■민주당 ‘효율적 개편 토론회’

“늦어도 2014년까지 마무리” 黨 기본 입장 정리

박병석 의장 “올해 案 마련 내년까지 입법 완료”

민주당이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되 일정 등에 따라 2010년 적용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오는 2014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

23일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101호실에서 열린 ‘제1차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부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발제를 통해 “오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일정 등의 이유로 어려울 경우에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2014년까지는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방법으로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 그는 “행정계층 1단계 감축, 시·군·구 광역화 등을 골자로 한 2006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합의 내용을 토대로 행정구역을 광역화해 행정계층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위위원장인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해관계, 특히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않고는 성사가 어렵다”며 “올해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민주당 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발제에서 “시·군·구를 통합해 광역시를 만들고 행정계층을 단순화하면 오히려 중앙집권화될 우려가 있다”며 “시·군·구의 구역은 유지하면서 광역개발, 지역경제 진흥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23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의원들과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서울특별시(서울+인천), 경기도(경기+강원), 충청도(대전+충북+충남), 전라도(광주+전북+전남), 경상도(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제주도(자치도로 존치) 등 전국을 1특별시와 5도로 구성하는 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자로 참석한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일시에 구역통합과 자치계층을 축소한다는 것은 논의만 무성하게 만들지 소득

이 없는 작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또 심익섭 동국대 교수는 “행정구역 개편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지역간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한 뒤 인센티브를 통한 적극적인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광역 분권제라는 준연방제적인 기반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목소리 높이는 노 前 대통령**

“호남 단결로는 집권당 못돼” 민주당 비판

‘민주주의 2.0’에 하루 2개 이상 글 작성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인이 개설한 토론 전문 사이트 ‘민주주의 2.0’을 통해서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국민연금 등 경제사회적 현안은 물론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과 같은 정당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홍수’까지 두고 있다. 정치 현안 개입으로 여겨질만한 언급이어서 정치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지난 18일 민주주의2.0이 오픈된 이후 23일 오전 현재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올린 글은 모두 13개. 하루 평균 2개 이상의 글을 작성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22일 밤 “민주당의 지지를 상응을 위해 구 민주계의 대표격이자 2002년 대선 때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유종필 국회도서관장과 화해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과연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호남정당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호남의 단결로는 영원히 집권당이나 다수당이 될 수 없고, 호남이 단결하면 영남의 단결을 해체할 수 없다”며 “안방정치, 땅짚고 헤엄치기를 바라는 호남의 선량들이, 호남표를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수도권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제 희망은 제발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혁에 전력을 쏟으면 하는 것”이라며 “선거구 개혁은 지난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하고자 했던 것인데 당시 박상천 원내총무와 일부 호남 정치인들은 하는척 하다가 말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선거범죄, 기초단체장에 가장 엄격”

“기소율·당선 무효율, 각각 37%·27% 최고치”

박지원 의원 ‘선거재판’ 분석

공직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이 국회의원에 비해 기초단체장에게 엄격히 적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17대 국회의원 및 2006년 4대 지방선거 선거재판’ 현황에 따르면 두 선거의 전체 기소자는 507명으로 기초의원 275명, 광역의원 94명, 기초단체장 85명, 국회의원 49명, 광역단체장 4명 등이었다.

또 기소자중 당선무효자는 기초의원 58명, 기초단체장 23명, 광역의원 19명, 국회의원 10명이었고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230명 중 85명이

기소돼 기소율이 37%로 가장 높았고, 기소자의 27.1%인 23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기소율과 당선무효율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회의원 기소율(16.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기소자 대비 당선무효율 비율도 20.4%로 기초단체장보다 낮았다.

기초의원은 9.5%의 기소율을 보였으며 기소자 가운데 58명(21.1%)이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광역의원은 기소율 12.8%, 기소자 대비 당선무효율 20.2%를 기록했다. 광역단체장은 16명 중 4명(25%)이 기소됐으나 전원이 당선을 유지했다.

한편 18대 총선의 경우 현재까지 기소된 의원 19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9명(47.4%)을 차지, 여당 의원 기소율이 13.8%포인트 낮아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재신임 받은 흥반장의 선택은?

(홍준표)

‘독선적 리더십’ 탈피 ‘포용’ 선택할 듯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사퇴론이 불거졌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3일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원내대표단의 할 일이 태산같고 갈 길이 멀고 험난한 만큼 현 원내지도부가 그대로 갔으면 한다”며 “홍 원내대표가 계속 이끄는 게 당과 나라를 위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신임 의사를 불었고 이에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이번 재신임은 ‘이명박 개혁입법’의 추진을 목전에 두고 원내지휘부 교체에 따른 혼란을 없애고, 친이·친박 등 계파가 엄중한 상황에서 당내 역학구도의 급변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퇴진 목소리에 직면했던 홍 원내대표의 역할 범위가 조정되고, 홍 원내대표

스스로 ‘버락 존표’, ‘홍반장’ 등으로 표현되는 독선적 리더십 행태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 대표가 원내·원외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언급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도 박희태 대표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홍 원내대표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재신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이후 홍 원내대표의 ‘퇴진론’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친이 소장파 의원들이 재신임의 전제조건으로 “홍 원내대표가 ‘일방 독주’를 인정하고 앞으로 잘해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피력해야 한다”고 내세운 점은 홍 원내대표에 대한 견제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수엑스포·F1 지원특위 위원 내정

(서갑원·우윤근·주승용) <조영택·김영록>

### 정가 브리핑

○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 한 가운데 국회 여수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에 광주·전남지역 의원 가운데 서갑원, 우윤근, 주승용 의원 등 3명이 내정됐다.

또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을 포함한 국회 국제경기 지원 특위에는 조영택, 김영록 의원이 내정됐다.

여수가 지역구인 김성근 의원과 F1 경기장이 들어서는 영암이 지역구인 유선호 의원은 각기 3선 의원 배제원칙에 따라 특위 위원에 포함되지 못했다.

자료요청 240건…광주시 ‘긴장’

○시정질의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광주시의회 자료 요청이 잇따르면서 광주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후반기 새로 원구성을 마친 의회가 더이상 ‘집행부의 시너’, ‘식물 의회’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겠다며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행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의원들의 자료 요청 건수는 모두 480건.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진 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만 240건에 이른 다. 그나마 결재 절차가 남아 있어 집행부에 전달되지 못한 것만 200건이 넘는 데다,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

의 추가 자료 요청 건수까지 감안하면 다음달 말까지 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붓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의회, 24~26일 임시회

○광주시 동구의회는 24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 169회 임시회를 열고 ‘광주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동구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관내 어린이 도서관·동구위생매점·동구문화센터 등을 방문, 운영 상황 및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자전거 활성화 조례안’ 제정

○광주시 남구의회가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전거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구의회는 23일 제 1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춘수 의원(민주·남구 라)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구청이 5년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동욱·김지영기자 tuim@kwangju.co.kr

2008 Incheon International Folk Dance Festival  
인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8. 9. 26 (목) - 10. 5 (일)

개최처: 인천광역시 옹진군 서해시 10.5(남)오동리  
전화: 한국4047(문화관광, 해외관광 등)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옹진군, 남동진, 남동진문화재단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옹진군, 남동진, 남동진문화재단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옹진군, 남동진, 남동진문화재단  
홈페이지: www.inchongfestival.org